

그대로 흐르게 하라

대한민국 4대강살리기사업의 진실
- 준설, 댐 건설, 하천생태계 파괴 -



2010년 10월



I. 한국인의 고향, 4대강

한반도의 큰 강줄기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한반도 모든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강을 우리의 핏줄, 젖줄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선 선사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따라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

4대강 곳곳엔 여울, 모래톱, 습지 등을 간직한 개발되지 않은 강의 원래 모습이 있어 야생동식물의 보고이자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 왔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과거의 유적지들이 그대로 묻혀있는 곳도 많아 문화인류학자들의 주요 연구지이기도 하다.



낙동강 제1지류 내성천의 모습. 강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래하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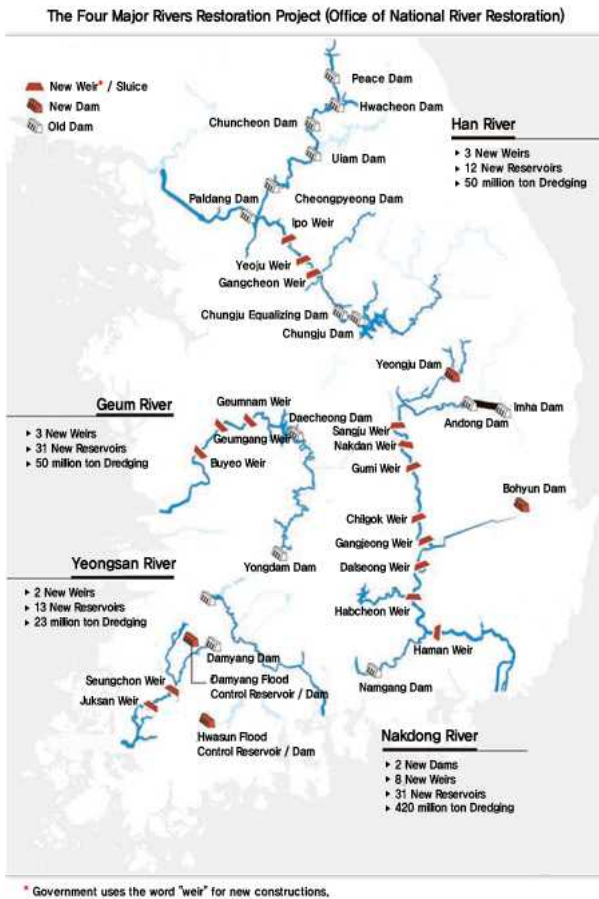
그러나 이곳도 낙동강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영주댐에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4대강 유역의 하구에 대도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강이 오염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4대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관리, 보호해왔다. 특히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강은 많은 재정을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며 한때 오염되었던 강들을 다시 복원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만든 댐과 하구둑, 모래채취, 인공제방 같은 강 개발이 결국 강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깨닫고 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강을 살리기 위해 애써왔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강의 원래 모습을 바꾸어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에 걸쳐 증명되고 있는 요즘, 한국 정부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이 강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대규모의 보(댐)을 짓고, 강변을 유락지로 바꾸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II. 4대강사업은 국가의 재앙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반도 4대 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개조해 뱃길을 만드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대규모 국민시위에 부딪혔고 결국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고 긴급 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사업 포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개명했고, 70% 넘는 사업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 22.2조원을 투자해 본인 임기인 4년 안에 끝장내겠다고 한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 5.7억^m 규모의 하천 준설, 1,376km의 자연거도로 조성, 16개의 보(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2조원을 투자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함
- 정부가 밝힌 4대강사업의 목적은 4대강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홍수·가뭄·수질 등 물 문제를 해결하며, 문화·관광·레저 환경을 조성하여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것임
- 국가경제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공간개선효과 등을 따지면 100원 투자에 230원의 이익을 남기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홍보함

4대강사업 소요재원과 사업내용

소관부처	예산	사업내용	
국토해양부	15.4조원	하천정비	신규
			계속
		댐 건설	
농림수산식품부	2.9조원	농경지 리모델링	
		저수지 뚝 높이기	
환경부	3.9조원	영산강 하구둑	
환경부	3.9조원	수질개선사업 - 하폐수 총인처리, 하수처리장 등	
총계*	22.2조원		

* 대한민국 2010년 총예산은 293조원

물 부족과 홍수피해 예방, 근거 없다.

- 정부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인구행동연구소(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PAI) 자료를 근거로 2011년 8억 톤, 2016년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또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댐이 필수적이라고 함
- 정부의 주장을 믿는다면, 한국은 내년도에 8억 톤의 물이 부족해 1,040만 명이 한 달 반 동안 식수난을 겪을 것임. 2011년까지는 약 3개월 남은 상황이지만 한국에는 어떠한 물 부족 징후도 없음
- 한국의 물 부족 근거는 4대강에 16개의 댐을 만들고 하천을 대규모로 굴착하기 위해 정부가 조작한 내용임
- 홍수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는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닌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과 산간 계곡임. 한국에서 수자원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홍수피해 규모저감과 분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선(하도, 제방)보다는, 공간(면 개념)의 하도와 홍수터가 포함된 개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은 동해안 및 남해안 연안 주변, 경기 북부, 영남 내륙지역임. 이 지역은 4대강 본류, 즉 4대강사업 대상지와 상관없는 지역으로, 만약 정부가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면 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함
- 4대강사업은 결국 건설업자를 배불리고 한국의 정치상황을 이명박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임

각종 법 절차 무시

- 국가재정법 위반 : 대형국책사업의 줄속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세금 22.2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변경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
- 하천법 위반 : 16개의 댐과 5.7억㎡ 하천 굴착을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수정하고 심의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는 위법을 저지름
- 환경영향평가 부실 : 1년 4개월 조사가 기본인 사전환경성검토도 불과 2~3개월 만에 줄속으로 진행하면서, 한국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다수를 누락하고 공사를 강행함
- 문화재보호법 위반 : 문화재 지표조사도 단 두 달 만에 속성으로 해치웠고, 이 조사에 참여한 23개의 기관 중 한 곳도 수중 지표조사 허가업체가 아니었음

수질·생태 고려 없는 속도전

-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2008~2012년) 내에 4대강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질·생태계의 악영향이 나타남
- 일반적인 토목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대략 1년 6개월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리나 4대강사업의 경우는 불과 7개월 안에 끝냄
- 장기간에 걸쳐 조사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이고 실제와 맞지 않거나, 동식물의 생태분포를 알 수 없음
-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준설토의 중금속 오염, 2,300만 수도권 식수원 오염 발생, 흙탕물 오염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함. 한국 사회는 4대강 찬반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양상임

일반적인 토목사업과 4대강사업 공사기간 비교

구분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	비고
일반 토목사업	1~2년	3~6개월	3~6개월	공사기간 2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4대강사업	3개월	2개월 이하	2개월 이하		총 2년

한국인 70%는 4대강사업 반대

강을 파괴하고 법을 무시하며, 온갖 편법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떨까? 한국사회에서 단일 사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처럼 높은 것도 드물며, 이렇게 장기간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70%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론으로 인해 정부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MBC PD수첩)이 방영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4대 종단이 앞장선 4대강 반대운동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사업 중단을 천명. 전국 모든 천주교 성당에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4대강사업 중단 생명평화미사 개최
- 불교 조계종 최고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4대강사업 중단 법회 개최. 화쟁위원회 구성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활동 중
-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 4대강사업 중단을 유서로 남기고 소신공양
- 개신교, 원불교 등도 4대강사업 중단 단식기도회, 4대강 순례 등 반대활동 전개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활동

- 전국 115개 대학 2400여명의 교수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구성
- 환경학, 토목학, 생태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영역의 교수들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지속적으로 발표

국민소송 중인 4대강사업

- 한국의 환경법, 행정법, 문화재관련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 1만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이 되고 변호인단 구성하여 4대강 소송 진행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사업 중단 활동

-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선 누락된 다수의 멸종위기야생 동식물들의 존재를 알리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모습을 폭로
-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농성, 대중집회, 캠페인, 홍보, 공사현장 방문 등 전개

- 환경단체 활동가들 한강 이포보(댐), 낙동강 함안보(댐)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 진행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저항운동

- 4대강 주변 농경지 약 30만ha가 사라지며, 비옥한 하천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모두 땅을 잃게 됨
- 한강의 팔당유기농업단지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메카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예정지임에도 유기농단지를 모두 없애고 이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임
- 한강 팔당, 낙동강 삼락 등지의 4대강 인근 농민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음

정치권의 핵심 이슈는 '4대강사업'

-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참패. 4대강사업 중단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당선. 원인은 4대강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며 복지정책이 후퇴되고 국민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한 결과임
- 10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국정감사는 '4대강 국정감사'라고 불리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III. 생명이 죽어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전역의 강을 개조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강 개발사업(TVA) 등을 벤치마킹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다. 모든 하천을 같은 형태로 통일하고 일괄 관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강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속에 곁들여 사는 생물종의 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하천생태계에는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1) 하천시스템 파괴

4대강 전역에서 5.7억m³ 규모의 준설과 골재채취, 16개의 댐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지형에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이 가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흐르는 물의 유수역(lotic ecosystem)이 전반적으로 고이는 정수역(lentic ecosystem)으로 바뀌면서 하천생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① 준설, 골재채취

- 다음의 사진과 같은 대규모 준설과 골재채취가 4대강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준설량은 한강 5천만톤, 금강 5천만톤, 영산강 2천3백만톤, 낙동강 4억2천만톤임
- 이는 그동안의 연간 골재채취량의 약 40배에 해당함



강바닥을 긁어서 얻은 모래와 자갈은 둔치에서 골재산을 이룬다.

「준설」에 대한 국제 하천전문가들의 평가

미국 하천지형학자 마티아스 콘돌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준설하여 모래와 자갈이 없는 강은 ‘배고픈 강’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준설과는 반대로 침식이 발생한 곳에 정기적으로 모래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본류의 준설은 하천지형학적으로 지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류와 지류의 하상 차이로 지류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져 침식이 심하게 된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남한강 지류 연양천, 간매천, 금당천에서 발생한 다리붕괴와 제방붕괴 현상도 4대강사업의 대규모 준설에 의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강 관리 방식과 전혀 다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강이 굽이치고 넘칠 수 있는 공간을 주어 준설과 제방 설치가 필요 없다.”

독일 하천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현재 한강과 낙동강이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강바닥 모양이 네모반듯한 상자 모양으로 변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준설작업을 통해 강바닥을 낮추면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류에서 물을 만날 경우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독일의 경우, 준설작업은 지하수 고갈문제와 홍수피해, 유속의 변화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40~50년 전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197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본 소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과 범람원 생태계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② 댐 건설

- 4대강을 따라 총 16개의 보(댐)이 건설되고 있음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보(weir)'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기능과 규모면에서 댐(dam)임
- 16개의 댐 이외에도 '하천 유지 용수 확보'라는 특이한 목적으로 영주댐 등의 신설 다목적댐이 추진되고 있음



보(weir)라고 불리는 댐(dam)

「댐 건설」에 대한 국제 하천전문가들의 평가

미국 하천복원전문가 랜들프 헤스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지금 4대강에 건설되고 있는 것은 규모면으로나 기능면에서 댐이다.”

“댐은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다. 오히려 강의 중·상류에서 홍수 위험을 높인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강의 경우 강둑을 제거한 뒤 인접 토지를 매입해 저류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수질이 향상되고 홍수 횡수가 줄어들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댐과 제방 등 강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댐을 허물고 하천을 복원하느라 지난 15년간 170억 달러를 투입해 최소한 3만7000건의 복원사업을 벌였다.”

독일 하천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댐을 건설하면 강바닥에 점토층이 생겨 방수코팅이 되기 때문에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못해 인근 농업지대가 오히려 용수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가뭄을 대비한 강수량 확보는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로 해결해야 한다.”

2) 보호생물종과 서식처 파괴

다양한 하천지형은 곧 다양한 서식처를 의미한다. 하천변의 버드나무 군락, 소택지, 모래톱, 범람원성 연못(둑병), 여울 등 다양한 서식처를 만들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모든 하천이 일정한 수심과 하폭을 가진 단순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강변의 자연습지, 버드나무 군락지, 모래톱과 하중도, 미나리밭 등을 훼손하고 나서, 그곳에 생태공원(갯강조성, 인공습지, 야생화원, 물고기생태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생태복원', '강 살리기 사업'이라 명명되었다.



바위늪구비의 과거와 현재, 자연습지를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① 식물 | 강변 자갈밭

- 좋은 환경에서 다른 식물종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척박한 생육환경에서 경쟁하지 않고 생육하기를 원하는, 독특한 식물종이 강변에서 나타남
- 이와 같이 하천의 자연적인 범람으로 경쟁종이 제거된 수변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남한강변에서만 발견되는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 단양쑥부쟁이(*Aster altaicus* var. *uchiyamae*)가 대표적임
-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생육지 훼손, 불법반출 등의 형태로 단양쑥부쟁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문제가 불어지자 시공사에서는 단양쑥부쟁이를 자생지에서 뽑아 대체식지라 불리는 화단에 옮겨 재배하고 있음



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파괴 (왼쪽부터 삼합리, 도리섬, 바위늪구비; 남한강)

② 어류 | 여울과 소

- 하천을 일정한 수심과 하폭을 가진 단순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4대강사업은 어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유수역(lotic ecosystem)에 서식하는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꾸꾸리(*Gobiobotia macrocephala*;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얼룩새코미꾸리(*Koreocobitis naktongensis*;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등이 대표적으로 위협받은 종임
- 4대강사업 현장에서 물고기 폐죽음은 일상적이어서, 환경운동가들이 누치(*Hemibarbus labeo*)와 멸종위기종 꾸꾸리 등의 집단폐사를 고발한 바 있음



한강살리기사업 3공구에서 집단폐사한 누치(*Hemibarbus labeo*)

③ 철새 | 모래톱과 농경지 먹이터

- 한국 4대강 주변의, 넓은 농경지로 둘러싸인 강변 모래톱과 수심이 깊지 않은 강물이 완만하게 흐르고 있는 곳은 국제적인 철새들의 중간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경북 구미시의 해평습지는 매년 10월, 월동지인 일본의 이즈미로 이동하는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Grus monacha*)가 기착했던 곳임
-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해평습지를 비롯한 강변 모래톱과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음



포크레인에 점령당하고 훼손된 경북 구미 해평습지. 2010년10월11일 모습 ©이희섭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 하천전문가들의 결론

“4대강 공사는 이후에도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즉각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197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본 소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과 범람원 생태계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하천전문가)

“건강한 강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면 되니 손대지 말고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 하천지형학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조경·환경계획학과)

IV. 한국식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문제점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얼리 무버(early mover)’, ‘그린리더(green leader)’의 정신을 갖겠다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green)’보다 ‘성장(growth)’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토건국가를 향한 녹슨 삽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장 위주의 ‘녹색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국제적인 ‘녹색성장’의 흐름에도 타당하지 않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토훼손사업인 4대강사업을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으로 선전 중이다.

한국식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의 핵심으로 제시함.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홍보함

- 이에 따라 2009년 1월,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할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고, 2월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함. 그러나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원자력발전 활성화, 수돗물 민영화, 4대강사업이 이른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됨
- 정부가 새천년 비전이라고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 사업 활성화라고 규정할 수 있음. 또한 2009년 1월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도 바로 4대강사업임

한국의 환경성적표는 163개국 중 94위

- 201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는 전체 163개국 중 94위임. 또한 람사르협약 사무국 발표 '람사르 습지 면적'은 159개 회원국 중 133위임
-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대안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산업계의 요구에 굴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치중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은 4대강사업이 한국의 환경성적표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함. 한국의 환경성적표는 갈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한국의 환경성과지수 변동

구분	순위	비고
2006년	133개국 중 42위	△ 1위 뉴질랜드 88점, 42위 한국 75.2점
2008년	149개국 중 51위	△ 1위 스위스 95.5점, 51위 한국 79.4점
2010년	163개국 중 94위	△ 1위 아이슬란드 93.5점, 94위 한국 57.0점

4대강사업 홍보국으로 변신한 환경부

- 한국 환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특히 4대강사업 홍보국으로 변신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환경부는 토건경제 부활이 아니라 자연환경,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함
-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생태·환경·생명 중심의 4대강'을 모토로 4대강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심지어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 기자실에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다수 누락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도 불허함
-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 공간 확보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4대강살리기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함. 환경부의 위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유엔환경계획에 던지는 질문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세계 녹색경제이니셔티브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그린 뉴딜(Global Green New Deal)을 발표(2009년 3월)하고 후속작업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첫 번째 보고서로 발표함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갈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전환 추구"라며 "산업화 시대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탈피, 저탄소-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한국의 4대강사업이 "물 문제 해결, 홍수예방,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목적 사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함

■ 유엔환경계획에 묻습니다.

1. 유엔환경계획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한국의 진보적 환경단체에 4대강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2.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3.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이 수자원 관련 문제, 특히 물 부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하는데, 한국의 물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전 세계적으로 하천 유역관리는 홍수터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방과 댐으로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유엔환경계획이 한국의 4대강사업, 특히 16개의 댐 건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34만개 일자리 창출은 한국의 학자들 내에서도 논란이고 조작의 의혹도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 유엔환경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4대강사업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단 3개월 만에 완료되었고 각종 멸종위기종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7.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성장, 특히 2009년 2월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이 4대강사업, 토목건축업 몰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핵발전소 확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8. 만약 위 질문에 명쾌하지 못하다면, 향후 한국을 방문해 녹색연합과 함께 4대강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인들은 이해 못할, 이명박 대통령의 생물다양성 협약 공로상(CBD Award) 수상

지난 8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CBD Award)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을 수여하면서 4대강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환경단체들과 세계습지네트워크 등은 CBD 사무국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야생동식물들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습지와 모래톱이 있던 강을 죽었다고 주장하며 콘크리트 보와 강바닥 파헤치기로 되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한국인들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CBD의 공로상 수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CBD, UNEP를 포함한 여러 해외의 기관들은 한국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에 내놓는 홍보성 자료만 확인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환경파괴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다. 한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물다양성 파괴 혐의로 NGO가 수여하는 ‘회색상(Gray Award)’ 후보에 적극 추천되어 상을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V.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 한국을 방문해서 4대강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홍보자료를 근거로 4대강사업을 확인하지 말고, 한국의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4대강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문문의 :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 이신애활동가 ☎ +82-2-747-8500, sihnae@greenkorea.org)

▷ 한국정부에 항의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집단에게 메일, 전화 등으로 항의합니다. 강을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강을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이명박 대통령 ☎ +82-2-730-5800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http://www.4rivers.go.kr>
 - 심명필 추진본부장 ☎ +82-2-2110-6063
 - 차윤정 환경부분부장 ☎ +82-2-2110-6056
- 환경부 <http://www.me.go.kr>
이만의 장관 ☎ +82-2-2110-6501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http://www.kwater.or.kr>
전병구 4대강사업처장 ☎ +82-42-629-3950

▷ 해외 언론은 4대강사업을 정확히 취재하고 보도하길 요청합니다.

한국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말을 되풀이 하는 거짓언론이 되지 말고 4대강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취재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길 요청합니다.